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19-2호 | 2019년 10월 25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양정철 | www.idp.or.kr

【10월 25일, 독도의 날】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일본 극우와 연결된 반국가 · 반인도적 범죄화 경향
방치 시 국가정통성 · 헌법정신 · 민족정기 훼손 우려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학술활동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적 대중선동행위
- 극단적 일탈행위에 강력 처벌 원하는 국민여론
- 특별법 제정, 과거문제 아니라 현재 미래문제
- 후대 올바른 역사인식 위해서도 시급제정 필요

1.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막을 특별법 시급

○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
 - 예컨대 <반일종족주의> 저자인 이영훈은 외신기자 300명이 참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
 -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반일종족주의>에 찬양·동조하면서 그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깃발’로 삼아야 한다고 정치세력화 다짐
- *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전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년 8월 13일)

* "(이 책이) 100만권 팔려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한일 문제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정종섭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년 8월 13일)

- 몇몇 개인의 비정상적·돌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인 친일행위로 전개되는 양상
 - 낙성대연구소,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등을 근거지로 일제 식민통치 미화, 독도포기 주장, 강제동원 부정의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
 - <반일종족주의>에 경도되어 스스로를 신친일파라고 자처하는 젊은 유튜버들이 파생 채널들을 만들어 수십만의 조회 수 기록. 급기야 소녀상에 침을 뱉는 등 패륜적 행위도 자행
 - 태극기부대는 일장기를 들고 나와 반정부시위를 하며 '친일이 애국'이라고 외치는 등 태극기모독부대로 전락

○ 국내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반국가·반인도적 행위로까지

- 국내 친일세력은 자율적 학술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국가·반인도 행위 자행
 - 일본의 경제침략 와중에 출간된 <반일종족주의>의 저술을 주도한 낙성대연구소는 그간 여러 연구들을 일본 도요타 재단이 준 자금을 받아 진행(노컷뉴스, 2019년 8월 21일)
 -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은 일본극우단체, 국제역사논전연구소가 대 준 돈을 받고 유엔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 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MBC, 2019.10.02)
 -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이 활동하는 이승만 TV는 자신들의 유튜브 강의에 일본어 자막을 달아 내보내 일본인들의 구독수를 현저히 늘리고 있으며, 지지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폭증
- 일본정부와 일본극우단체는 한국 친일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강연, 책, 논문, 동영상 등을 국제 여론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
 - <반일종족주의>는 일본의 '문예춘추'에서 11월에 번역 출간예정
 -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발행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논문과 저서들을 요약·번역해 미국 의회에 로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남(뉴스타파, 2019년 8월 8일)

○ 많은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반국가적 선동행위이며 반인도적 2차 가해행위라는 사실에 다수 국민 동의
 - 최근 '친일 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다니' 등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으로 나타

남(리얼미터, 2019년 8월 26일)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6%가 찬성(리얼미터, 2019년 2월 18일)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음
 - 지금까지 세 차례 법률안 발의
 - * 원희룡(2005): 일제강점기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 * 이종걸(2013):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 * 홍익표(2013):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박광온 의원(2018)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토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응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 내용

□ 법안의 목적

-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반국가적 행위와
- 일제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전쟁범죄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막고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자진 지원,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대응행위를 처벌함으로써
-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처벌대상

-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일본의 역사부정에 대응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제 강점기 학대나 학살에 관여했던 일본전범 혐의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현재 24명)
 - 특별법에서는 입국 대상자를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 처벌행위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 반국가적 행위

- 일제 식민통치 시기 우리의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 처벌근거
 - *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독립국가임을 천명
- 사례
 - *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 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친일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한승조 교수, 2005)
 - *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정안기 교수, 2015)
 - *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영훈, <반일종족주의>)
 - * “일본통치시대 당시 일본 국내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학교교육과 식민지교육은 차이가 없었다. (...) 즉 일본은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병합한 것이고, 소위 다른 외국의 식민지 지배와는 완전히 달랐다.”(일련신문, 한국일련정중발간- 일본계 종교단체, 2019.06.08.)

－ 반인도적 행위

-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 처벌근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함
 - *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2018):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적시
 -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례
 - *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김완섭,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 * “일본이 강제연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위안부는 조금 일하면 돈 번다는 유혹에 의한 자발적 매춘이었다.”(류석춘 교수, 2019.09)
 - *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송대엽 교수, 2017.04)
 - *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이영훈, <반일종족주의>)
 - *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에 갔으며, 징용은 합법적이었다.”(이우연, 2019.08)
 - * 강제동원 노동자상, 위안부 소녀상 철거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이우연, JTBC, 2019.09.28)

○ 일본의 역사부정 내용행위

-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와 내용해 그들의 입장을 찬양·동조·선전하는 행위
-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 강탈행위를 옹호, 정당화하는 일본 내 극우단체 등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 규정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진 지원하는 행위,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개인이나 단체 처벌
 - 경제침략상황에서 일본을 편들고 일본의 전쟁범죄부인에 동조해 한국 사법부의 강제동원배상판결을 폄훼하는 등 반국가행위 자행
 - 사례
 - * 낙성대연구소 이우연은 일본회회의 예하조직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에서 마련한 경비로 2019년 7월 2일 유엔제네바본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 또한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 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2019.10)
 - * 일본극우단체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이사, 후지키 슌이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우연 연구위원과 이영훈 교수를 계속 소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힘(오마이뉴스, 2019.10.14.)

□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의 비교

○ 특별법의 특징

-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정통성 수호,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후손의 명예훼손방지, 전쟁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과 그 후손의 인권침해방지, 미래후손의 역사의식제고로 종합
- 역사적 진실규명보다 현존하는 명예·존엄침해 방지 및 차별방지를 강화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는 최대화
 -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기존법률(각종 독립유공자 관련법률),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등), 각종 유엔기구들의 보고서 등에 근거
 - 기존에 발의된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이 국내 친일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친일세력들도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에 내용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내용하는 행위를 한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

법안명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용하는 행위 처벌 특별법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종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홍익표)	역사왜곡 금지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발의일		2014.6.20	2014.8.14	2018.11.29	2005.8.1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후손의 명예훼손 방지 전쟁범죄피해자 및 유족, 그 후손들의 인권침해 방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족정기 수호 미래후손들의 역사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막아 헌법 체계를 수호하고 국가의 근간을 지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 및 친일 행위 찬양 또는 항일투쟁 비방, 독립운동가와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훼손행위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또는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행위 왜곡·찬양·고무·선전 내용정보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운동에 기초한 헌법의 이념 수호 올바른 역사인식과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
처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식민통치 옹호하는 반국가행위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후손, 전쟁범죄 피해자 및 유족과 그 후손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반인도적 행위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와 내용해 그들에게 금품수수 등 지원을 받고 그들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개인과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을 위한 일제항거 행위 비방, 과거사왜곡, 친일반민족행위 찬양 및 정당화 하는 내용의 유포 사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사 왜곡행위, 순국선열 등에 대한 명예훼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포함한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강점하에서 행해진 관동대학살 및 조선인 강제동원 등 민족차별행위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강제 동원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해외사례

○ 역사부정죄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

- 생존 피해자와 후손의 명예(재피해자화의 금지), 인간의 존엄성, 차별금지를 정당성의 근거로 형법이나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처벌
-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범죄 부인과 증오적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18개국
- 체노사이드 부정을 처벌하는 비유럽 국가는 콜롬비아, 이스라엘, 르완다 등 3개국
 - 이밖에 증오(혐오)표현만을 처벌하는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세르비아, 스웨덴,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인도,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핀란드, 호주 등이 있음

○ 역사부정죄 주요국가 사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형법 제130조 제3항(1994): 일명 '국민선동죄'	게소법 (the Gayssot Act of 1990,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언론자유법 제24조(1881)	나치금지법 (Verbotsgesetz) 1947	집단학살거부법 (1986년)	독일 국가사회주의정권 (나치)에 의해 범해진 인종학살의 부정·정당화·지지 억제에 위한 법률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치 지배하에서 저질러진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독일 기본법 제1조인 "인간 존엄성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 근거 • 독일 헌법재판소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정은 일개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와 일관적 결론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게소법 제정을 통하여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를 출판물 등을 통하여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 •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월 8일,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합헌이라고 선언 • 다만, 이러한 규정은 역사적인 논쟁을 금지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치조직 설립 부활 기도시 10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 • 반인륜 범죄 등을 인쇄물·방송 등에서 배포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 인쇄물, 방송, 여타 매체에서 또는 기타 공연히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치의 제노사이드, 나치의 인도에 반한 범죄를 부정하거나 전면적으로 경시하거나 두둔하거나 정당화를 시도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치 정권 동안 유대인 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범죄 행위를 거부하거나 가해자를 방어하는 표현, 범죄 행위를 찬양 또는 동정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가능 • 다만 유대인 또는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의 공표는 동정 또는 행위자와 같은 의견임을 표현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처벌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범해진 (국가·종족·종교적) 집단살인을 부정하거나, 현저히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는 최소 8일 최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26프랑 이상 5000 프랑 이하의 벌금 • 상습범은 형법에 의해 시민권 박탈 가능

○ 역사부정죄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 대량학살방지협약 (1948)	유럽연합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행위 방지협약(1996)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서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1946.12.11.) 결의로 '제노사이드는 유엔의 정신과 목적에 반대되며 문명세계에서 최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 범죄임이 확인되었고 인류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왔으므로 이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채택 • 제3조, 제4조: 제노사이드 공모, 직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학살, 잔혹한 범죄,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인륜범죄·전쟁범죄를 지지·부정·경시하는 행위를 1~3년 징역형 처벌 규정 •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종족·피부색·종교·출신성분·국적·인종에 따라 정의되는 사람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혐오 공개 표출', '출판물·사진 또는 다른 물건의 유포나 판매를 통한 공적 자극 행위',

<p>그리고 공개적인(public) 제노사이드의 선동(교사), 미수, 공범 / 헌법상 책임 있는 자와 공무원은 물론 사인(private individuals)도 처벌 대상에 포함</p> <p>• 제5조: 제노사이드의 형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국내 입법 의무 부과</p>		<p>‘인종학살·반인륜범죄·전쟁범죄 등의 공공연한 지지·부정·경시’ 등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뒤야 함</p>
---	--	---

